

인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8.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3,287천 km ²	G D P	12,872 억 달러 (2009)
인구	1,198.00 백만 명 (2009년)	1 인 당 GDP	1,074 달러 (2009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Rupee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48.41 (2009)

- 인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방글라데시, 미얀마 및 벥골만, 서쪽으로 파키스탄과 아라비아해, 북쪽으로 중국, 네팔 및 부탄, 남쪽으로 인도양과 접하고 있음.
- 인구는 세계 6분의 1인 11.6억명에 달하며,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임.
-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서 독립 이후 자립지향적 수입대체형 경제체제를 유지해왔으나, 1991년부터 자유화 정책을 채택,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을 추진해오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제성장률	9.7	9.0	6.2	5.7	8.0
재정수지 / GDP	-3.3	-2.6	-6.0	-6.5	-5.5
소비자물가상승률	5.8	6.4	8.4	10.9	11.4

자료: IMF, EIU

□ 경기 회복 가속화

- 인도는 2004/05 회계연도(2004.4월~2005.3월)부터 2008/09 회계연도 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평균 8.5%의 고성장세를 지속함.
- 그러나 2009/10 회계연도 중에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5.7%로 다소 둔화되었음.
 - 인도는 수출입 비중이 GDP 대비 40% 이하로 경제성장을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민간소비가 주도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 세계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었음.
 - 또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2009년 중 타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함.
-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FDI 유입 증가로 2010년 1사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8.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09년 하반기 이후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여 2010/11 회계연도 중에는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부양책 및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열악한 조세제도 및 낮은 소득세 징수율로 인한 세수 부족,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도의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가 2007년 GDP의 2.6%까지 축소되었으나, 2008년에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세 인하,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등 경기 부양책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로 확대됨.
- 2009년에는 5월 총선에 따른 선심성 정부지출 증가, 물품세 및 관세 징수액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6.5%로 더욱 확대되었음.
- 2010년에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인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소비세 인상, 비료와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로 정책을 전환하는 한편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 중 2,500억 루피 (약 55억 달러) 상당 규모를 매각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재정적자폭이 6%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 지속

- 유가 상승, 식료품 가격 및 임금 인상, 가계부문의 소비 증가 등으로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을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가치 하락,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08년 8.4%로 급등하였음.
- 2009년에는 강수량 부족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국제 상품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9%로 더욱 악화됨.

- 최근에는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제조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도 대표적 물가지표인 도매물가(WPI)가 2010년 5월 중 10.2%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도 10.6%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인 리포금리와 역리포금리 인상을 금년 3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단행하였으며,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통화 긴축 정책 실시로 2010년 중 물가 상승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7월 27일 네 번째 금리인상으로 3월 이후 리포금리는 4.75%에서 5.75%로, 역리포금리는 3.25%에서 4.5%로 상향 조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전력, 도로, 항만, 통신 등의 열악한 인프라로 매년 인도 경제 성장률의 2%포인트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인도의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으로 식료품 배송이 지연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요한 식료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인도 정부는 인프라개발을 위하여 약 1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여, 최근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만 개방하였던 증시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확대 개방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민간자본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임.

□ 만연된 관료주의로 행정에 많은 시간 소요

- 인도는 심각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업무로 행정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힘이 커서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도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업 개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개시후에도 세무, 노동문제 발생의 경우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12억에 달하는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인도는 1991년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장벽의 완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연평균 5~8% 대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외국인투자 규모도 국제 기준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40억 달러에서 2009년 372억 달러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규모가 2009년말 현재 6,0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농촌 거주자들의 고용 보장 정책 추진 등으로 농촌 저소득층 비율이 감소하고 신규 중산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도의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월 신규 가입자가 600만명에 이르며, 자동차 시장도 매년 12~13% 성장하는 등 인도의 소비계층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인구가 201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2025년에는 약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인 수준의 IT 산업

- 인도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2009년 기준 농업 17.1%, 제조업 28.2%, 서비스업 54.7%로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 중 IT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임.

- 영어 구사 능력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IT 산업 지원 정책, 미국 및 유럽과의 시차에 따른 이점 등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콜센터 등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개방 및 개혁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지향

- 국민회의당(Indian National Congress; INC)을 중심으로 한 통일 진보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은 2004년 5월 집권시 사회적 화합의 증진, 경제성장 지속, 농민 및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경제계획(Common Minimum Program)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경제개혁을 통해 공동경제계획의 목표대로 2004년 5월부터 2009년 4월 집권 1기 동안 평균 8.5%의 고성장을 이루었음.
- 2009년 5월 총선에서 UPA가 압도적인 승리를 함에 따라 포괄적인 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좌파 정권의 반대로 지연되었던 산업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2011년 4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중이며, 보험업 등을 민영화 하고 노동 규제를 완화 하는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중임.
- 또한 금융, 보험업, 항공업, 군수업 등의 외국인 지분을 상향 조정 하고, 문구, 건설장비, 전자제품 등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글로벌 소매 유통업 개방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임.

□ 재정정책

- UPA 정부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세제 개혁을 통한 세원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실시하고 수출진흥 및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총선을 위해 선심성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수지 적자폭이 2007년 2.6%에서 2009년 6.5%까지 다시 확대되었음.
- 인도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근 보조금을 폐지하고, 소비세를 인상하는 한편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S&P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우려로 2009년 2월 '부정적'으로 조정하였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인도 정부의 농가 비료 보조금 축소, 유류 소비세 현실화 등 적극적인 재정적자 규모 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2010년 3월 '안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음.
- 인도 정부는 2010년 4월 중 3G 이동통신 주파수와 무선 인터넷 사업권 입찰로 예상가보다 세 배 이상인 1조 1,000억 루피(약 235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2010년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경 상 수 지	-9,299	-11,284	-36,088	-26,626	-27,042
경상수지 / GDP	-1.0	-0.9	-2.8	-2.1	-1.7
상 품 수 지	-42,804	-58,710	-95,808	-101,754	-126,194
수 출	123,768	149,314	187,912	168,244	200,939
수 입	166,572	208,024	283,720	269,998	327,133
외 환 보 유 액	170,187	266,553	246,603	258,583	256,334
총 외 채 잔 액	143,402	204,992	230,611	243,651	273,451
총외채잔액 / GDP	15.2	17.1	18.0	18.9	17.2
D. S. R.	8.6	15.7	10.1	11.1	7.9

자료: IFS, EIU, GDF

□ 경기 회복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인도의 상품수지는 큰 고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점진적 무역 자유화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 상품수입의 약 1/3을 차지하는 석유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어 왔음.
- 2008년 말부터 세계경기 침체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세를 보여 상품수지 적자가 2008년 958억 달러에서 2009년 1,018억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중에는 국제 유가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2009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근로자 송금 또한 소폭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는 2008년 361억 달러에서 2009년 266억 달러로 감소함(GDP 대비 2.8%에서 2.1%로 축소).
- 2010년 중에는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세 지속

-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등 IC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 344억 달러(2007년) → 352억 달러(2008년)
→ 372억 달러(2009년)

- 인도 정부가 그 동안 지연되었던 소매업, 보험분야 지분한도 규제 완화 등 추가개방조치와 노동법 적용 완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UPA 연합의 압승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기반 마련

- 소니아 간디 UPA 연합 의장 및 만모한 싱 총리 등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UPA 정부의 정책 및 업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2009년 4~5월간 실시된 제15대 총선에서 국민의회당 중심의 UPA 연합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 총선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BJP)은 2004년 총선시 보다 21석을 상실하며 정치세력이 더 약화 된 반면, UPA 연합은 543석 중 262석을 차지(국민회의당 206석)하여 그동안 좌파연합과의 연정으로 지연되었던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좌파연합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2. 사회동향

□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 다양한 종교, 민족, 언어 등이 공존하는 등 복잡한 사회구조를 보이며, 지역간 경제발전 및 소득격차가 매우 커서 지역간 불균형을 보이고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계층간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1950년 공식적으로 철폐된 카스트 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인도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인도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일반화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인내와 관용의 국민성 또한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를 포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야당 주도의 총파업(Bharat Bandh) 발생

- 인도 정부의 유류가 인상에 대한 항의로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와 인도공산당(CPI) 등 좌파야당들의 주도로 2010년 7월 초 총파업이 발생하였음.
- 금번 총파업의 경우 웨스트 벵갈, 카마타카 주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파가 많은 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인 호응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BJP당과 CPI당 등 야당들이 총파업을 위해 연합하였으나, 실제 야당간 결속력이 크지 않아 향후 큰 위협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국제관계

□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 추구

- 인도는 국제 사회로부터 받는 관심을 실리 위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모든 국가와 균형을 유지하며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대외관계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 일본, 독일, 브라질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공동협력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의 주도적인 국가로 활동하고, 주요 강대국들과의 협력체 및 신흥개도국들과의 협력체 등 다양한 협력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파키스탄과 긴장과 화해 관계 지속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제 및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3차례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 왔음.
- 2006년 7월 뭄바이열차 연쇄폭탄테러 이후 같은 해 11월 양국 정상 회담으로 대테러 협력방안에 협의하는 등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나 2008년 11월 또다시 뭄바이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관계가 최근까지 냉각 상태를 유지해 왔음.
- 2010월 4월 부탄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7월 중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반정부 무슬림 시위대와 인도군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계정상화 합의 후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정치적 긴장관계와 실리적인 협력관계 병행 전망

- 2005년 원자바오 총리 및 2006년 후진타오 주석의 인도방문을 계기로 과거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협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국과의 교역량이 2008년 기준 UAE, 미국 다음으로 양국간 경제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이 양국간 영토분쟁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정식 비자가 아닌 여행증명서 형태의 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인도는 중국 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중국이 티베트 지역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다시 양국간 관계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
- 2010년 양국간 수교 60주년 맞아 열리고 있는 양국간 기념 행사들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국경문제, 지역 패권경쟁 등으로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 능력

- 총외채잔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또한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이 세계 6위 규모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채권국으로서(2009년 기준 GDP 대비 16% 규모) 외채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0.8)	D1 (2009.12)
OECD	3등급 (2010. 4)	3등급 (2009. 4)
S&P	BBB- (2010. 3)	BBB- (2009. 2)
Moody's	Baa3 (2010. 7)	Baa3 (2009.12)
Fitch	BBB- (2010. 6)	BBB- (2008. 7)

- 인도의 외화장기채권에 대해 S&P는 2007년 1월 BB+에서 BBB-로, Moody's는 2004년 1월 Ba1에서 Baa3로, Fitch는 2006년 8월 BB+에서 BBB-로 상향조정 한 후 추가적인 등급 조정이 발생하지 않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 전액 인수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전액 인수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10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0일)
- 주요협정: 무역경제기술협력협정(1974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5년), 투자보장협정(1996년), 세관분야협력협정(2006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009년 체결, 2010년 1월 발효)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인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인도	2007	2008	2009	주요품목
수 출	6,600	8,977	8,013	자동차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수 입	4,624	6,581	4,142	석유제품, 식물성물질, 천연섬유사
합 계	1,976	2,396	3,87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2007년 112억 달러에서 2008년 15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중에는 122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 인도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3월말 현재 502건, 18억 달러(투자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2009년 중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5.7%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FDI 유입 증가 등으로 2010년에는 8%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2009년 중 6.5%로 확대되었으나, 정부가 세금 인상, 유류세 보조금 폐지, 공기업 지분 매각 등 재정수입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2010년 중 재정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임.
- 빠른 경기 회복으로 경기가 다소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두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인도 중앙은행(RBI)은 금년 3월부터 7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9년 5월 총선에서 UPA 연합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집권 1기 동안 좌파연합과의 연정으로 지연되었던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좌파연합의 도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되었음.
- 인도의 총 외채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외환보유액이 전세계 6위 규모이며 순채권국으로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진경 (☎02-3779-6686)

E-mail: jinkyung22@koreaexim.go.kr